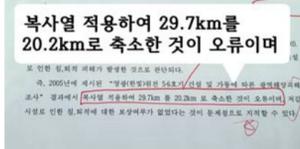


복사열 적용 피해 범위 줄이고 퇴적 피해 보상 논의도 제외

한수원 56억 들인 2005년 한빛원전 용역 오류 파문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의 '한빛원전 가동으로 인한 영광군 해역 해양오염 영향조사' 용역은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 범위 뿐 아니라 항후 바닷물 점·사용 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닌, 전남도, 영광군, 영광군수협 등 지역이 주도해 추진한 한빛원전 관련 용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 복사열 적용 사례 전무후무 바닷물 점·사용 허가에도 영향 보상 확대 등 재논의 불가피



한수원 보고서, 복사열을 적용한 게 오류라고 명시했다.

터 훨씬 더 보호되는 점을 고려하면 필히 많은 영광군 특성상 복사열을 적용한 '광역해양조사 보고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수산과학연구소 분석이다.

연구소는 또 국내 온배수 확산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중 복사열을 적용한 사례는 한빛원전을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서해안인 서천, 태안화력 등에서도 적용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동, 남해에도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게 연구소 설명이다.

연구소는 이같은 점을 들어 당시 "어업피해범위를 결정하면서 복사열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한빛원전 5.6호기 가동에 의한 1도 온배수 확산 및 어업피해 범위영향 범위는 당초 복사열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범위가 인정돼 합리적이라 판단된다"고 요약보고서에 기재했다.

◇"온배수 저감시설로 인한 침, 퇴적 피해도" 연구소는 또 온배수 저감시설로 인

한 침, 퇴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 설치로 인한 침, 퇴적 결과, 연간 1~2m 퇴적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온배수가 외해 쪽으로 피해 범위 폭이 넓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게 연구소 용역 결과다.

연구소는 이같은 결과에도 당시 저감시설로 인한 침, 퇴적에 대한 보상 여부가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꼽았다. 항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영광군수협측도 이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어업인 단체 등과 설명회를 갖고 항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을 자문을 거쳐 추가 소송이나 보상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보고서는 온배수로 인한 어장황폐화를 추정할 수 있는 결과도 반영했다는 점에서 한수원측의 바닷물 점·사용 허가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 보고서에는 온배수로 인한 영광지역 해역 어장 변화상과 어획량 감소 등을 추정할 수 있는 통계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영광군 수협측은 예상했다.

영광지역 어민들도 지난해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에 '냉각해수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할 당시 '한빛원전 가동으로 인한 영광군 해역 해양오염 영향조사' 용역 결과가 완료될때까지만 허가를 내달라는 민원을 영광군에 제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용역보고서에 원전 가동으로 인한 어장 변화, 생산량 감소 등에 대한 어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얼마나 제시될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 원리 구현돼야"

검찰개혁 후속조치 당부

경찰·국정원 개혁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도 (권력기관이)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 개혁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기 위해서는 "디테일"에 한층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검찰과 경찰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리'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정당성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개혁도 입법

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이제까지의 개혁 작업이 모든 권력기관의 권한 양상을 막고 '민주적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 메시지만인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하며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신임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후속조치를 맡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의 개혁 의지를 한층 강조하는 동시에, 정 총리의 '책임총리' 위상에 도합을 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임종석 정강정책 연설로 당 복귀...총선 출마 주목

불출마 선언후 첫 정치행보

서울·광주·전남 출마 거론도



임종석

영으로 '가자'를 주제로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실시했다"며 "대표 연설자로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임 전 비서실장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임 전 실장이 이번 연설을 계기로 정치에 복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전국구'로서 무게감을 갖춘 만큼, 총선에 직접 출마해 비박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임 전 실장이 총선에 출

마한다면 후보지로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종로를 비롯해 추미에 법무부장관 지역구인 관진 을, 예전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일각에선 임 전 실장이 전남 장흥 출신인 만큼 아예 광주나 전남에서 출마해 호남의 차기 주자로서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임 전 실장을 지역적 틀에 묶어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1일부터 이틀간 '공존과 협력을 통해 공동 번

영으로 '가자'를 주제로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실시했다"며 "대표 연설자로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임 전 비서실장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임 전 실장이 이번 연설을 계기로 정치에 복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전국구'로서 무게감을 갖춘 만큼, 총선에 직접 출마해 비박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임 전 실장이 총선에 출

마한다면 후보지로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종로를 비롯해 추미에 법무부장관 지역구인 관진 을, 예전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일각에선 임 전 실장이 전남 장흥 출신인 만큼 아예 광주나 전남에서 출마해 호남의 차기 주자로서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임 전 실장을 지역적 틀에 묶어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1일부터 이틀간 '공존과 협력을 통해 공동 번

영으로 '가자'를 주제로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실시했다"며 "대표 연설자로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임 전 비서실장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임 전 실장이 이번 연설을 계기로 정치에 복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전국구'로서 무게감을 갖춘 만큼, 총선에 직접 출마해 비박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임 전 실장이 총선에 출

마한다면 후보지로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종로를 비롯해 추미에 법무부장관 지역구인 관진 을, 예전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일각에선 임 전 실장이 전남 장흥 출신인 만큼 아예 광주나 전남에서 출마해 호남의 차기 주자로서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임 전 실장을 지역적 틀에 묶어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1일부터 이틀간 '공존과 협력을 통해 공동 번

영으로 '가자'를 주제로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실시했다"며 "대표 연설자로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임 전 비서실장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임 전 실장이 이번 연설을 계기로 정치에 복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전국구'로서 무게감을 갖춘 만큼, 총선에 직접 출마해 비박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임 전 실장이 총선에 출

마한다면 후보지로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종로를 비롯해 추미에 법무부장관 지역구인 관진 을, 예전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일각에선 임 전 실장이 전남 장흥 출신인 만큼 아예 광주나 전남에서 출마해 호남의 차기 주자로서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임 전 실장을 지역적 틀에 묶어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1일부터 이틀간 '공존과 협력을 통해 공동 번

영으로 '가자'를 주제로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실시했다"며 "대표 연설자로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임 전 비서실장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임 전 실장이 이번 연설을 계기로 정치에 복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전국구'로서 무게감을 갖춘 만큼, 총선에 직접 출마해 비박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임 전 실장이 총선에 출

마한다면 후보지로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종로를 비롯해 추미에 법무부장관 지역구인 관진 을, 예전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일각에선 임 전 실장이 전남 장흥 출신인 만큼 아예 광주나 전남에서 출마해 호남의 차기 주자로서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임 전 실장을 지역적 틀에 묶어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1일부터 이틀간 '공존과 협력을 통해 공동 번

영으로 '가자'를 주제로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실시했다"며 "대표 연설자로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임 전 비서실장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임 전 실장이 이번 연설을 계기로 정치에 복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전국구'로서 무게감을 갖춘 만큼, 총선에 직접 출마해 비박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임 전 실장이 총선에 출

마한다면 후보지로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종로를 비롯해 추미에 법무부장관 지역구인 관진 을, 예전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일각에선 임 전 실장이 전남 장흥 출신인 만큼 아예 광주나 전남에서 출마해 호남의 차기 주자로서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임 전 실장을 지역적 틀에 묶어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1일부터 이틀간 '공존과 협력을 통해 공동 번

영으로 '가자'를 주제로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실시했다"며 "대표 연설자로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임 전 비서실장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임 전 실장이 이번 연설을 계기로 정치에 복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전국구'로서 무게감을 갖춘 만큼, 총선에 직접 출마해 비박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임 전 실장이 총선에 출

마한다면 후보지로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종로를 비롯해 추미에 법무부장관 지역구인 관진 을, 예전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일각에선 임 전 실장이 전남 장흥 출신인 만큼 아예 광주나 전남에서 출마해 호남의 차기 주자로서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임 전 실장을 지역적 틀에 묶어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1일부터 이틀간 '공존과 협력을 통해 공동 번

영으로 '가자'를 주제로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실시했다"며 "대표 연설자로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임 전 비서실장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임 전 실장이 이번 연설을 계기로 정치에 복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전국구'로서 무게감을 갖춘 만큼, 총선에 직접 출마해 비박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임 전 실장이 총선에 출

유치원3법 공포안·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계획 국무회의 의결

법률안 2건·대통령령안 23건

검찰청 기구 개정령안도 의결

'유치원 3법' 공포안과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계획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 법률공포안 3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가운데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은 '유치원 3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

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올림픽 공동 유치와 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따라 검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13곳이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정부는 또한 총청권이나 수도권 소재 국립대가 교육 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공주대·충남대·충북대·한국교통대·한밭대·서울과학기술대·한경대·한국체육대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되는 공동 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울러 정부는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오는 30일에서 2022년 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의료광고심의의제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특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자갈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차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